

선학원, 법인법 폐지 운운 자적있나



홍다영 기자의
현장에서
hong12@ibulgyo.com

“전국 선학원 분원 360여개 중 230여 곳을 방문한 결과 가정집으로 변했거나 해당 주소지에 사찰이 없는 등 이미 폐사된 절이 10 곳이나 됐다. 분원인줄 알고 들어갔더니 곳 당이고 타종단 승려가 상주하는 곳 등도 7곳이었다. 주지 스님이나 거주자들이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적도 수도룩하다.”

최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들은 소식이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전국비구니회, 선학원의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이 3개월 동안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 분원을 직접 가보니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해왔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간 소속된 분원에 대해 적절한 지원관리와 선풍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

“230여 곳 중 폐사된 절 10곳
곳당·타종단 상주 등도 7곳”
선원기능 수행 어려운 곳도…
설립정신 정체성 문제없나

는지 의심을 사기 충분한 대목이다.

기자 또한 동의서 관련 시안으로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지역 선학원 분원을 방문했을 때 유사한 일을 겪었다. 약 한 달 전 택시를 타고 한 선원을 찾아가간 적이 있었는데,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 사찰을 찾았지만 절을 알려주는 표시하나 없어 헤맨 적이 있다. 다행히 인근 부동산과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물어 물어 도착했지만 절은 없고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 나왔다. 가까이 가보니 안에 부처님이 계셨다. 스님은 출타 중이라 없었고 외관만 봐선 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볼 올리면서 사찰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이날 방문했던 나머지 두 사찰은 여법한 도심포교도량으로서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곳저곳 선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와 닿았다.

현재 선학원은 종단이 법인을 장악하려 한다며 “법인법을 전제로 한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 법인법은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제는 선학원 이사회가 선학원 분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힐 차례다. 한국불교 전통 독신출가 수행자 공동체를 지향하려고 설립된 선학원이 과연 설립초기 정신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타종단 승려는 물론 무승적자, 무속인이 설립한 곳까지 사찰로 등록받아 종단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

주민요구로 소작주고 받은 대가 지역에 회향하는데 ‘세금 폭탄’

◎ 20대 국회, 개정해야할 불교법령 ⑥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휴경지나 인근 주민들에게 소작로 정도만 받고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해 일선 사찰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민측문화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해 명백한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존지가 수익사업 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이 유류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일부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주민들 요구로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A사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땅을 내주고 추곡으로 거둬들여 받은 일정 금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경작지를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이후 사찰에선 쌀 등을 받아 수행과 포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는 사찰 토지를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세금을 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사찰은 “주민들로부터 쌀과 현금으로 받아 일정 부분은 사찰 유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 소외계층 등 500여 가구에 다시 회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도 제시했다”면서 “일반에서 생각하는 영리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유사한 예로 강원도 B사찰 사하촌의 건물들은 대부분 전통사찰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종교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찰과 거리

명백한 영리·수익사업 아니면
전통사찰 토지활용 비과세 마땅
“시대 흐름따라 법령도 변화해야”

가 멀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발생한 사찰 보존에 필요한 필수자원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흥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 토지 활용 방법도 변화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전통사찰을 단순한 특정종교시설로 대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각회 등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19일 위촉장을 받은 19명의 조계종 제4기 화쟁위원들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줄 가운데), 위원장 도법스님 등과 자리를 함께 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사회갈등 해소 기여할 수준됐다” 화쟁위원회 4기 ‘출범’ 홍선스님 등 19명 위촉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기 위원회를 꾸리고 새 출발에 나섰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19명의 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화쟁위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종단 안팎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4기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위원장) △도법스님(결사추진본부장) △홍선스님(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오심스님(중앙종회 차석부위원장) △정문스님(총무원 사회부장) △혜조스님(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정관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김용승(아름다운나라의기둥 대표)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점란(보타의

대화연구소 소장) △신호승(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한성(범무법인 위드유 고문변호사) △이항민(인드라마연구소 소장) △정웅기(사부대 중위원회 총괄처장)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 △조형일(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최영기(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황도근(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

위촉장을 수여한 총무원장 스님은 “갈등이 많은 사바세계에서 사회안정과 국민행복은 결국 누가 대립과 분열을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화쟁위원회가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

왔다고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앞으로 화쟁(和諍)의 이름으로 어려운 현장에 뛰어들어 곳곳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년 1기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도법스님은 “우리의 역량 부족과 성숙하지 못한 세간의 풍토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으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종단 내부의 문제를 화쟁적으로 풀어내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4기 화쟁위는 위촉식을 마친 뒤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도법스님, 부위원장에 홍선스님과 조성택 교수를 선출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평생교육 거점학교 우뚝 동국대, 정부로부터 인정

‘평단사업’ 추가 선정돼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에 동국대(총장 보광스님)가 추가로 선정됐다.

동국대 선정 배경으로는 기존에 대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와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연계를 통한 융합형 전공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찰행정 및 형사사법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치안과학융합학과와 사회복지·상

담·보건 등을 융합한케어복지학과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선행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령기 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학들이 평생교육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단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발전시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선정된 대학에서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학위 또는 비학위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해당 학교에는 지원금이 교부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2016년 중무행정학교 ‘예비중무원 양성과정’ 개설

한국불교의 미래, 전문 중무원의 꿈을 찾아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부처님 법을 받들고 전파하며,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중무 인력 양성을 위해 “중무행정학교 예비중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전문 중무원의 꿈을 찾는 청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16년 8월 23일(화) ~ 26일(금) / 3박4일

● **교육장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운암리 604) / 041-841-5050)

● **교육내용**

과정	기본소양과정	직무역량향상과정
주제	▶ 불교! 쉽고 명쾌한 이해, 사찰기본예절 ▶ 조계종의 이해와 비전 ▶ 근현대 조계종사 ▶ 선체험프로그램 ▶ 중무원의 가치와 행복 ▶ 사찰문화의 이해	▶ 공문서 작성의 이해 ▶ 템플스테이의 이해 ▶ 사찰중무행정프로그램의 이해 ▶ 비즈니스 매너교육 ▶ 사찰중무의 이해(사찰답사) ▶ 모범형 팔로워십

● **교육인원** : 40명 이내 (중무원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대상)

● **교육이수자 특전**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중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역사찰 등 중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 사찰중무원 추천

● **교육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5일(월) ~ 8월 10일(수)

- 접수방법 : 팩스(02-720-3302) 및 이메일(kys@buddhism.or.kr)로 접수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100,000원 (교육이수시 교육비 전액 환급) ※입금처는 교육 참석대상자에게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교육참석 안내 : 참석대상자는 8월 12일(금) 16시 핸드폰 문자로 개별 통보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2011-1723